

전쟁 끝난 여야 '총선 앞으로'

내부 결속 다지고 지지층 결집 자평...포스트 패스트트랙 고심 민주 추경처리·한국당 장외 투쟁·바른미래 갈등 수습 총력

선거제 개정 및 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지지층 결집 및 정세 개편 등 내년 총선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대치정국 모드를 이어가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질주할지, 아니면 갈등을 수습하고 다시 마주 앉을지 기로에 선 상황이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정세개편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내 제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승부를 달리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동맹 국회'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지만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계기로 승화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회식도 열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를 통째로 날려버린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선이 1년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 등 마냥 민생을 외면할 수도 없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일정 정도 냉각기를 갖고 물 밑 접촉에 나서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없다"(나경원 원내대표)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한국당은 주말 광화문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선전전을 벌일 방침이다.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원내외 투쟁을 다각도로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투쟁 장기화에 따라 내부적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여론의 역풍도 우려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출구전략을 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두 동강이 날 위기에 처한 만큼 갈등 수습을 일차적 과제로 설정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온

바른정당 출신 유승민계는 물론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일부 의원들도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제3당의 존재감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고 보고, 다시금 '제3지대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당내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평화당도 오는 7일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당의 결집과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제3지대에 미온적인 정동영 대표 등 주류와 창조적 파괴를 통한 정세개편을 모색하는 초선 의원들 간 충돌도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체 일은 언제할겁니까? 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항의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더기 고발에 의원들 '긴장'

60여명 수사 대상... '피선거권 박탈' 최대 관심

선거제와 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을 쏟아내면서 앞으로 이어질 수사기관의 수사 항배에 관심이 집중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현역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자유한국당 등이 서로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고소·고발한 한국당의 원이 최소 42명에 이르고, 한국당이 고소·고발한 여야 의원이 최소 17명에 이른다. 수사대상에 오른 현역의원만 60여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은 이 법이 마련된 2012년 이후 7년 만에 형사 사건으로 변질 첫 사례로 기록된다. 국회선진화법은 처벌이 무겁다. 통상 일반 형법은 어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 위반죄의 경우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아울러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경우에만 처벌되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여야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수사 기관의 수사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 여야 의원들 중 한국당에 의해 피소된 의원들은 피선거권에 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던 한국당 의원들이 피소된 법적 근거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166조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 서류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는 한국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형법상의 폭행이나 상해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의원 간 몸싸움은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 서류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는 한국

민주 원내대표 경선레이스 개막

후보 등록...패스트트랙 대야협상력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김태년·노웅래·이인영(가나다순) 의원 등 3파전으로 전망되는 경선에선 원내사령탑 자리를 놓고 3선 의원들 간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경선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원내사령탑을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 가남다. 특히, 차기 원내대표가 다음 달 8일 임기를 시작하면 바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 능수능란한 대야 협상력도 요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긴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야당과의 대화·협상에서 능력을 갖춘 원내대표 자질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의 김민석 원장은 "차기 원내대표는 '총선 원내대표'이자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내대표'라는 성격이 강하다"며 "특히 패스트트랙이란 강제된 협상장에서 복잡한 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협상력이 중요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맞서 강경한 투쟁을 선언해 대치정국의 꼬인 실타래를 풀 협상가 면모가 차기 원내대표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총선 승리를 이끌 강력한 리더십과 정무 감각, 계파성 등 선거결과 좌우할 요인이 많지만,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라는 특수성이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에 계파성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당면 과제를 어떤 사람이 잘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간지대의 표심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물리나라" vs "정면 돌파"...바른미래 내분 2라운드

지도부 바른정당계 사퇴 요구에 "존재감 보였다" 손학규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주승용 임명 예정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내용을 거듭해 온 바른미래당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일단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지도부 퇴진론'이 거세게 일면서 향후 정세개편을 앞두고 내부 권력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조짐이다.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사퇴를 하는 게 그나마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자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김

관영 원내대표에게 '명예 퇴진'이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계의 이태규 의원도 불교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바른정당계를 이끄는 유승민 의원은 이날 새벽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 (지도부의) 불법과 거짓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끝장 대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성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모처럼 제3당의 존재감을 발휘했다고 보고 이 기세를 몰아 퇴진 요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호남 의원들은 손 대표와 함께 방어에 나서는데 모험이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을 진보나 보수,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세력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일부 세력의 책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 대표는 그동안 미뤄온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1일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온건파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최고위

원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인(하태경·이준석·권은희)의 당부 거부로 파행 중인 최고위원 회의의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책임론을 거론하며 당을 분란으로 빠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의 결집과 외연을 확장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수십명의 국민의당 출신 전·현직 원외위원장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손 대표 체제 유지를 주장했다. 박준선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한 '개인 정치'를 하고 있다"며 "과연 패스트트랙이 당을 쪼개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1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17 12 point

1 3 0 7 5 8 4 9 2
116 10 point

2 4 6 3 7 1 2 8 0
115 8 point

4 6 2 8 1 0 9 7 3
113 6 point

J2 5 point
J1 4 point
J1* 3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한 번 시공으로 고민 끝!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